

성명서

- 가이후 일수상 방한에 즈음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힌다 -

1991년은 일본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된지 46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10년이 한일합방조약을 연상케하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조약을 맺은지 2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1991년 벽두에 아키히토일왕의 방한 준비로 가이후 일수상이 온다고 한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있던 동안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용·징집해 갔다. 특히 정신대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범죄행위로 일왕의 “황군”에게 “내린” “하사품”이라 하였는가 하면 싸움터에서는 “공동변소” 취급을 받았다.

우리 여성계는 1990년 5월 18일 노태우 대통령 방일을 즈음하여 정신대에 관련하여 진상규명, 인정, 사죄, 보상상등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낸바 있다. 그 당시 가이후 일수상은 전시중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조사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6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일본정부위원은 강제연행은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나 정신대는 이에 의거해서 된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군과 함께 데리고 다닌 모양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망언을 했다.

이에 우리 여성계는 지난 10월 17일 한·일 양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바 있다.

1.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 것.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가이후 일수상은 무슨 얼굴로 한국땅을 밟으려는 것인가.

우리는 가이후 일수상은 방한에 앞서 이미 공개서한에서 요구한 6개항의 현안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여성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본정부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정신대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1991년 1월 8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구세군 대한본영 여성사업부
 대한성공회 어머니회 전국 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한국 루터교 여신도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학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기독교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탁아소 연합회
 민족미술 협의회 여성미술연구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대구여성회
 전북민주여성회
 제주여성회

- 부산여성회
 충북여성회
 충북여민회
 수원여민회
 공해부방운동 연합여성위원회
 한국 기독교 농민회총연합회여성위원회
 여성사회 연구회
 한국 카톨릭 농민회 여성부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감리교사회선교여성회
 두레방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연구회
 여성교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정신대연구회

內閣總理大臣 海部俊樹 貴下

한국의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1990년 10월 17일자로 내각총리대신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동년 11월말까지 답변을 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년 12월 20일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만 1991년 3월 26일 현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1년 3월 26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 장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구정동 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내
전화:730-4400 100-120(우편번호)

정대협:제91-21호

1991.10.28

수 신: 귀하

제 목:종군위안부를 위한 부지 마련 요청의 건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990년 11월 16일에 발족된 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7개의 여성단체와 그 밖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일제하 겨레여성의 아픔이었던 "정신대"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종군위안부를 위한 위령비의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바람을 그 당시 돌아가신 종군위안부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나아가 이 땅위에 다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정표를 남기고자 독립기념관 안에 이 위령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1990.11월과 1991.3월 저희 산하단체인 교회여성연합회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과 외무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귀회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부디 좋은 소식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 동 대 표 : 박 순 금

이 효 재

윤 정 옥

독립기념관

기획 01251-114 (64-8150) 1991. 11. 23.

수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장

제목 종군위안부를 위한 위령비 건립 부지마련 요청에 대한 회신

1. 정대협 제91-21호('91.10.28)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한을 받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하에서 희생된 종군 위안부들의 원혼에 대하여 다시한번 명복을 빌면서 귀하와 귀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 귀하의 요청한 바에 따라 본인은 독립기념관의 유관단체의 대표나 전문학자와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1) 독립기념관을 건립추진할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여 1983년 4월 28일과 1985년 4월 9일,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을 건립기획위원회에서 그 성격을 규정한 바, 기념관은 선열의 유적지나 묘소 또는 영령을 모시는 사당이 아니라 순수한 교육전시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2) 그때 독립운동의 순국선열과 징용징병 정신대 등으로 인한 원혼의 위령 문제도 논의 되었습니다. 일부의견으로 전시관 중에 순국자나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모시고 추모하는 전시공간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전시장의 성격과 다르다는 뜻에 따라 논의만 끝나고 "추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독립기념관 중앙 뒷편 언덕이며 기념관의 진산적인 흑성산 기슭 아늑한 곳에 "추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모의 자리"는 독립운동과 식민통치하에서 희생된 가신님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 곳에는

기획 01251-114

1991. 11. 23.

숲 사이로 185계단을 마련하고 식민통치하에서 고통과 희생, 저항과 독립운동을 묘사한 조각벽종으로 둘러싸 추모의 정을 한결 높여주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관람객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이 이 "추모의 자리"에 올라가 정중하게 묵념하고 기도하고 있는 광경은 자못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3) 귀 회의 요청과 같거나 비슷한 요구가 과거에도 공식 비공식간에 있었습니다. 가령 "의병 순국비" "광복군 공적비" 등의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앞에 말한 "추모의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와 보고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 경내에는 어떤 위령탑도 건립이 계획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금번 귀 회의 요청을 계기로 "추모의 자리"를 더욱 뜻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단장하고 보완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요청을 요청한 대로 조치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시기 바라며 귀 회의 값지고 뜻있는 활동에 대하여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끝.

독립기념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구정동 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내
전화:730-4400 100-120(우편번호)

1991. 10. 29

정대협:제91-21호

수 신: 귀하

제 목:정신대 희생자 실태조사 대책위 구성 요청의 건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0년 11월 16일 발족된 이후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협의회는 정신대 실태조사가 미흡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의회는 정치, 행정적 차원에서 도움을 얻고자 지난 1991.3.7 정대협 제91-8호를 각 국회의무통일위, 내무부, 외무부, 총무처(가나다순임)등에 보내드리거나, 정무제2장관실등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 사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의 이 "정신대희생자실태조사를 위한 대책위 구성요청"은 물론 각 부처별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신들은 현실적으로 조사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오니, 깊은 관심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현재 정신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 조사위 구성 및 활동이 속히 진행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며,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속에 이뤄지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회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부디 좋은 소식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 동 대 표 : 박 순 금
이 효 재
윤 정 옥

항 의 문

- 가또오 관방장관의 망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5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서 공식적으로 1990년 11월 16일 발족한 이래 종군위안부문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본 정신대협의회는 금년 12월 5일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연대하여 일제하 전 종군위안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12월 6일 일본국의 가또오 고이찌 관방장관은 이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로서는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며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슴지 않고 발언했다.

본 정신대협의회는 가또오의 이 발언이 곧 일본정부의 전체입장임을 인식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과거에도 일본정부는 1990년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의 사실은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망언을 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정신대 협의회는 1990년 10월 17일 공개서한을 보냈고 이어 두차례의 독촉장을 띄웠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는 한번도 회신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또오 장관의 망언이 재차 자행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국이 과연 아시아의 평화와 호혜적 국제협력을 원하고 있는 나라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며 본 정신대협의회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가이후 일본 전 수상에 게 보냈었던 공개서한에 대한 회신을 거듭 촉구하며, 또한 가또오 장관의 망언을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앞으로 본 정신대협의회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본정부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1. 가또오 관방장관은 종군위안부와 관련한 망언을 책임지고 공개사과하라.
1. 일본은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1.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만행의 전모를 밝혀라.
1.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라.
1.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하라.
1.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과서에 이 사실을 명기하라.

1991년 12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우리 정신대협의회는 오는 1992년 1월 8일을 기해 수요일 정기집회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1990년 11월 16일 36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공식발족한 이래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6개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있는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무책임한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정신대협의회는 이에 분노하며 앞으로 우리의 6개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1. 일본정부는 조선인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1.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1.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1. 희생자들을 위하여 추모비를 세워라!

1.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1.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1992. 1.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 동 대 표 : 박 순 금
이 효 재
윤 정 옥

성명서

— 미야자와 일본 수상의 방한을 반대한다. —

우리는, 일본이 패전후 4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땅의 민중들에게 자행한 식민지 만행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은 물론 만족할만한 사죄조차 하지 않은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앞세워 또 다른 군국주의의 부활을 획책해온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신대 만행의 정식 사죄와 배상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수상의 방한을 절대 반대한다.

전쟁중 일본은 10만~20만으로 추정되는 이땅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병사의 성적위안물로 이용하는, 독일 나찌의 유태인 학살보다 질적으로 더 잔학한 만행을 저질렀다.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하루에도 수십명을 상대하다가 죽어 갔을 뿐 아니라, 일제가 폐망함에 따라 증거인멸을 위해 집단학살을 당하거나 혹은 전쟁터에 버림당해 무참히 죽어갔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은 그때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채 아직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90년도부터 우리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만행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간 어떠한 성의 있는 답변이나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정신대는 민간업자가 한 일이며 국가기관이나 군이 관여했다는 단서는 없다"고 발뺌해왔다.

그러한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일본에 있는 양심 세력의 연대노력의 결과로, 정신대 만행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관련문서의 발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육군성의 중군위안부 모집지시 등을 담은 공문이 발견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대의 위안부로 동원하고 직접 관리해온 주범이 바로 일본 정부와 그 핵심인 일왕의 황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우리는 일본이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사과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는 사과는 작금의 고조된 우리국민의 해결의지를 무마하려는 일시적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배상 및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는 사과는 기만이며, 무참히 능욕당한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본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정신대 관련 자료를 찾아서 부대별 위안부 인원수와 명단은 물론 그 만행의 전모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야자와 수상의 이번 사죄에 그 공개의 시기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

러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6개항의 요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다시한번 우리는 만행전모의 규명과 6개 요구사항의 수락이 없는 사죄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다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정신대 만행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
3.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4. 희생자를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라!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1992. 1.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 일본정부는 정신대 진상규명하고, 배상하라 —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일간의 교류, 협력은 암울했던 일제 식민 치하에서 일본군의 세계제패 야욕에 억울하게 희생된 정신대 여성들을 비롯한 전쟁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본의 만행이 완전히 공개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암울했던 과거를 은폐, 무마하려는 태도는, 최근 일본의 평화유지법 제정을 둘러싼 움직임과 한국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대 문제에 대한 배상과 추모비 건립, 왜곡된 역사에 대한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수상의 방한을 반대해왔다. 미야자와의 방한을 즈음해 정신대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가 고조되고, 당시의 만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출하자 일본은 '국가기관이나 군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한-일간의 과거 청산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군이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관리에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 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정신대 관련자료의 공개와 배상의 수준 그리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수사학적 잔재주나 부리는 미야자와의 기만적 사과 앞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교류를 원한다면 아래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 일본정부는 정신대 만행의 전모를 공개하라!
1.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1. 역사교과서에 정신대 사실을 명기하고 교육시켜라!
1. 피해자를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라!
1.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민간 단체의 노력을 수수방관해 온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정신대를 포함한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65년의 굴욕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 당사자인 김종필 등이 아직도 우리

의 국회에서 '국민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현 정권의 대외종속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정부가 이번 일본 수상의 방한에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야자와의 입에 발린 사과 앞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정부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일 교류 실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정신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일제 잔재의 청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신대 만행을 입증하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제시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된 지금에 와서야 정신대 실태조사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것은 물론, 경제문화교류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정부는 정신대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1. 정신대문제 해결없는 굴욕외교 반대한다!

1992. 1. 1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정신대 강제동원과 관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한 마무리'를 내세워 정신대 피해배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가시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내지 못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최근 정신대 진상 규명 작업 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일련의 정부 발표를 주시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이번 일본수상의 방한에 즈음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태도는 우리정부의, 대 일본 자세가 아직도 굴욕적인 65년 한일기본조약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일교류 실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외교를 실현하여,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또 다시 이땅에서 일제 36년과 같은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 식민지 만행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대 문제해결을 비롯한 과거사의 청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부인해 온 정신대 강제동원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일본의 전후 '경제적 재침략'의 발판이 되어온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신대는 물론 수많은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가 '청산'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진정한 과거의 청산을 위한 정부간의 교섭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며, 민족적 피해에 대해 국가적인 배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정신대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일제 잔재의 청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대 대책과 관련한 최근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들끓는 여론에 밀린 일시적인 자구책이 아니라, 정부의 진정한 대응 의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신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정신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정신대 피해 상황을 접수, 일본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근거들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로서 우리는 정부의 적극 대응 여부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992. 1. 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 다시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

우리는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한 우리의 6개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미야자와의 방한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방한한 미야자와 일본수상을 정작 실질적인 보상의 문제를 회피한 채, 입에 발린 기만적인 사과만을 되풀이 하고 돌아갔다. 이전과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요구해 온 우리 국민과 희생된 영령에 대한 모독이자 시대착오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만행의 전모의 규명과 실질적인 배상이 선행되지 않는 어떤 사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일본이 12세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교육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하고 노예노동자로 혹사시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근로정신대를 포함, 전쟁기간 중의 인력 동원과 수탈의 진상을 밝히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것을 비롯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국가가 저지른 범죄임을 공식 인정한 이상, 국가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대를 비롯한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65년의 조약으로 정신대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정' 되지도 못했던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당시의 '일팔타결론' 조항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 정부의 관여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와 생존자의 증언이 속출하는 지금, 65년의 기만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당연히 새로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아울러,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적절한 배상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구제기금' 운운 하며 문제를 일본 정부의 시혜차원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배상은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일본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둔다. 또한 우리는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법 체계를 이용한 교묘한 말장난을 되풀이 할 경우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도 더불어 밝혀둔다.

넷째, 우리는 '우리 세대의 잘못이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는 미야자와의 발언을 주시하며, 그것이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다. 아울러 반일교육의 중지를 요구한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우호적인 한-일관계는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일러둔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짐하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해결의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2. 1. 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도자료*참조 (각 언론사 참조)

일 시 : 1992년 1월 22일(수요일) 오전 9:30

장 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의실

제 목 :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의 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으로의 활동계획

대 일본정부

- (1) 정신대 피해배상을 일본 법원에 소송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의 규모나 형태, 구체적으로 인선여부는 추후 발표할 예정임)
- (2) 2월중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신대 실상"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효재 공동대표는 2월 초순 미국을 방문한다)
- (3) 매주 수요일 12:00~13:00일본대사관 앞 정거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 (4) 그 외 대 일본 공개서한등은 수시 채택하겠다.

대 한국정부

- (1) 정부의 정신대 신고전화 설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전화가 설치되도록 예의 주시하겠다.
- (2) 열악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응급생활보호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 (3) 독립기념관 내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 (4)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자주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속에서 일본 정부와 노력해 나가도록 촉구하겠다.

내부사업

- (1) 신고전화 접수와 정신대문제의 실상 조사
- (2) 독립기념관 내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의 계속
- (3) 92년도내 추모제 행사
- (4) 기타 후원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대여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신대 피해신고 현황(별지참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 동 대 표 : 박 순 금
이 효 재
윤 정 옥

* 참조) 위 보도자료는 1992년 1월 22일 기자회견을 위한 자료였다. 피해신고 현황은 그 이후 신고까지 포함하여 별도로 실었다(II-(2))

1988년 5월 22일 KQED-TV “전쟁속의 세계” 프로그램중 정신대관련 발언에 대한 항의문

본회는 7개교단의 교회여성들이 연합한 여성단체로서 그 회원이 150만명에 달합니다.

본회는 1973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짐을 인식, 창조질서를 회복코자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정신대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해오던 중 귀하가 1988년 5월 22일의 “전쟁속의 세계”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정신대원들은 일본제국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지역에까지 자원해서 들어와 사병들을 위안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한국여성이 아니면 누가 기꺼이 이 험악한 정글의 전쟁터에까지 나와 젊은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신대는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잔인한 민족 말살정책의 하나로, 순결한 이 땅의 여성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병사의 정액받이로 이용한 역사상 유례없는 비인간적 행위였습니다.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의 딸들은 하루에 4-50명을 상대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갔는가 하면, 일본군의 패전으로 전쟁터에 버려지거나 집단학살의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혼이 아직도 원한에 사무쳐 떠돌고 있는데, 36년간 한국의 모든 것을 착취해가고, 이 땅의 딸들을 일본병사의 공동변소로 사용했음에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 추후의 반성없이 “대일본제국”의 망령에 사로잡혀 이러한 망언

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일본의 계속적인 역사왜곡과 그 궤를 같이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왜곡, 오키노토를 비롯한 일본관료들의 망언, …등등은 일본의 침략근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한민족에 대한 일본인의 기본적인 인식을 나타내는것이다.

우리는 군국주의의 망령의 부활을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한국의 기독교여성들은 생명을 영태하고 기르는 어머니로써 한민족의 자랑스런 딸로서 도저히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귀하에게 TV나 매스컴을 통해 귀하의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열희
교회와사회위원장 손연숙
총무 윤영애

구세군 대한본영 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 어머니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 전국연합회(통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복음교회 여신도회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찌 귀하

세계는 이제 국제간의 신뢰구축과 개인까지도 인간성 회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지금, 전후 46년간 주변국들의 고통을 딛고 미국의 비호아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칭 인도주의국임을 공언하고 목소리를 높혀가고 있다. 그런 일본국의 새 수상 미야자와 방한을 맞게된 우리 태평양전쟁의 희생자 여자정신대-중군위안부 생존자들은 우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일제식민지 지배시대로부터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의 역사는 이루말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시 순결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일군대의 위안부로 희생시킨 정신대문제는 세계역사상 달리 찾아볼 수 없는 과거 일본의 범죄적인 만행인 것이다.

정신대문제를 이날까지 일본정부는 무책임한 발뻠으로 외면해왔지만 이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 및 정신대-중군위안부 모집을 직접 지시, 감독, 통제했음을 확인해주는 당시의 군문서가 일본방위청에 보관되었음이 확인된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더이상 「사죄와 배상」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한일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를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다시 미야자와 기이찌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과로 일관한다면 우리민족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의 일생을 희생당한 정신대 생존자를 또다시 죽이는 것이다.

미야자와 수상은 이번 방한에서 정신대문제는 물론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수상의 양심적인 사죄와 보상을 확실하게 공언해야 한다.

진실한 한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에 입각한 정의로운 과거역사의 청산이 필수요건이다.

미야자와 수상 방한을 계기로 필히 다음 사항의 관철을 요구하는 바이다.

- (1) 지금까지 방치한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공표하라.
- (2) 일본의 반인간적 만행에 일생을 치욕으로 살아온 정신대 생존자와 학살로 죽어간 그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하라.
- (3) 일본은행에 예치된 노동력수탈, 미불임금 [공탁금 반환]에 대한 환원대책을 공표하라.
- (4) 1991년 12월 6일 동경지방법 재판소에 제소된 군인, 군속, 중군 위안부 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과 진실을 밝히는데 역사의 정의 앞에 최선을 다하라.

1991. 1. 14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96-12
Tel 461-0830 (정신대신고전화)

청 원 서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지난 1990년 6월 6일 제118회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어난 망언사건(사회당의원 모토오씨가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관한 질문을 하자 일본 정부의 노동성직업안정국장 시미즈씨가 "한국인 종군위안부는 일본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이며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조사할 수 없다"라고 답함)을 계기로 지난 1990년 11월 16일 한,일 양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정신대문제자료집1 p50)을 보내면서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문제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국의 젊은여성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속이거나, 강제로 끌고가 전쟁터에서 일본군의 위안물로 삼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입니다.

본 정대협은 정신대문제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조명하여 다시는 이 땅위에 그와같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정신대회생자들의 문제를 풀어줌과 동시에 일제가 이 나라에 대해 자행한 정책의 본질, 즉 민족 정기말살, 민족성말살, 민족의 씨를 없애버리려 했던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 가이후 수상앞으로 2차례의 공개서한과 2차례의 독촉장을 보냈으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 4)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5)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6)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속에서 이사실을 가르칠 것.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무부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이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답신(정신대자료집1 p55 별첨참조)이 왔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위와같이 노력하고 있는 본 정대협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을 비롯한 여성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6개항의 요구를 일본정부가 받아들일도록 하기위해 서명운동(일본 요청서 별첨참조)을 벌이며 열심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1)공개서한을 여러통을 받아 답을 해야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제기해 오지않는 문제를 민간단체에 답하기가 주저된다는 것과 2)한국문제를 거론하면 아시아의 피해국 여러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어떤식으로든 이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정대협은 이상에 언급한 6개항의 요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3개항을 청원드리기를 바입니다.

- 1) 공개서한을 통해 이미 요구한 우리의 요구 6개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2) 정신대회생자 실태조사 위원회를 정부에 두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 3) 독립기념관내에 정신대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991. 7.

청 원 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윤정옥외 2인

청원인 주소:중구 정동 1-23 한국교회여성연합회내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종교위안부 3명

日정부에 損害訴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한 위안부 3명

11.27
11.27

【東京 27日電】 위안부 3명(高木 登、佐野 實、高木 繁)가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挺身隊 日本軍官할

美軍보고서 첫발견

日紙 보도

【東京 27日電】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한 위안부 3명(高木 登、佐野 實、高木 繁)가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東京 27日電】 위안부 3명(高木 登、佐野 實、高木 繁)가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張明秀

【東京 27日電】 위안부 3명(高木 登、佐野 實、高木 繁)가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11.27

그 여자들의慰靈碑

【東京 27日電】 위안부 3명(高木 登、佐野 實、高木 繁)가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1945년 10월 10일 日政府에 損害訴를 제기했다.

"挺身隊동원 日정부 개입" 美공식文書 첫 공개

28. 91. 12. 21

모집·선박 제공·性病검사 등 日軍이 총원·인영 全面주노

美軍, 44년 日軍진술등 토대 작성

【美軍】 44년 日軍진술등 토대 작성... 美軍은 44년 日軍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日軍이 총원(총원)과 인영(인영)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모병, 선박 제공,性病(性病) 검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日軍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美軍의 관점에서 日軍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美軍은 44년 日軍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日軍이 총원(총원)과 인영(인영)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日軍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美軍의 관점에서 日軍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 문서는 日軍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美軍의 관점에서 日軍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挺身隊항의」 日지방 확산

28. 91. 12. 23 日정부-韓人 등 百30명... 반성 촉구

【東京=聯合】 日政府는 挺身隊(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항의는 日 정부와 韓人 등 百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日 정부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挺身隊(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항의는 日 정부와 韓人 등 百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日 정부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12.8 대구 文玉珠씨 두번째 신고... 또다시 4년간

정신대피해자 신고전화를 열고 있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회장 尹貞玉)에 지난 8월의 김학순씨(67)신고에 이어, 두번째로 대구에 사는 文玉珠씨(67)가 『42년부터 해방이듬해인 46년 4월까지 3년9개월동안 버마-태국-야유타이를 동남아에서 중군위안부생활을 했다고』 2일 신고해 왔다.

그는 인간이하의 위안부생활중 술에취해 칼을 휘두르는 일본군인을 정당방위로 살해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정신대 피해자

文씨는 19살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다가 한 한국남자의 『돈 잘버는 좋은 곳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나서 중군위안부생활을 했다는 것.

그는 전쟁마지막에는 육군야전병원에서 무급으로 간호사조수역할도 했고, 일본군 패전 8개월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해방후 40여년간 혼자몸으로 파출부-보따리장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文씨는 요즘 『눈에 가림 조는 것 외에는 밤에 눈을 붙일수 없을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 몸이 매일 쑤신다』며,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신고했다』고 말한다.

정 91. 11. 3

在日 南北연성 20명 挺身隊 규명회 조직

【東京=聯合】 在日 南北연성 20명 挺身隊 규명회 조직... 이 회회는 日 정부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挺身隊(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항의는 日 정부와 韓人 등 百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日 정부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挺身隊의 항의가 日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日公式文書 발전 의미

1.1.11

중립국배출... (Small text columns describing the significance of the document)



“民間이 했다 주장 마땅하
“개인보상 정파 함상과 마관

다...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discussing public opinion and government actions)

△...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日 정인려 관립자택 여지

△... (Text regarding Japanese officials' residences)

挺身隊 日 공식 문서 첫발견

挺身隊 日 공식 문서 첫발견

二. 慰安所 状況

1. 慰安所... 所管警備隊長... 警備地... 以下 爲 開...
2. 近來各種慰安設備(食堂... 其他... 增加... 共... 軍慰安所... 逐次表
現在從業婦女數概千名內外

<위안소 상황문서>

日本軍이 挺身隊집중을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이 日本방위청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相關문서내용을 日本역사학회수가 공개함으로써 10일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사진은 「戰時旬報」의 「위안소상황」이라는 문서. <5.15면에 相關기사·朝日신문전송>

동아 92 1.11

“정신대 말로만 사죄는 기만” 여성계 피해배상 강력 촉구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은 16일 한국방문을 앞두고 여성계에서 일본 정부에 한국인 중군위안부(정신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 피해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미야자와 수상은 한국방문기간 중 합예정인 공식사죄가 배상문제 인연없이 형식적 차원에 머무는다면 여성단체들은 실태조사 및 공개, 피해보상, 위령비 건립 등 6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항의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성연합회 등 3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5일 낮 12시 추방일본대사관 앞에서 스 한국인 여성을 강제연행해 일본군의 성욕처리 도구 역할을 강요한 만행을 인정하고 공식조사, 발표 합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배상할 것 스페셜자 위령비 건립 스텔본의 역사교과서에 이 사실을 수록할 것 등 6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탑골공원까지 항의 피켓시위를 벌

일 예정이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36개 여성단체 이외에 대한YWCA 연합회,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도 참가한다.

한국여성성연합(위원장 김정혜)도 16일 오후 2시30분 인본회관 20층에서 ‘정신대 희생자에 대한 사회와 배상추구대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보내는 진의문, 일본 정부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행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정신대 명부 등 정확한 실태와 진상을 조사해 피해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여성계에서는 지난 11일(육지 필대일기) 공개된 뒤 일본 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입장을 정한 만큼 “일본 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려는 게 마땅하다”면서 “일토만 배상없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배상없는 사죄는 기만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추방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실태조사와 공개,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더욱이 지난해 12월7일 국내 생존자 중 처음으로 자신이 정신대였음을 증명한 김학순(67)씨 피해배상요구소송을 제기해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일본수상 방한 앞두고 항의시위 잇따라 진상조사·위령비건립 등 6개항 관철키로

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전후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입장지만, 민간인의 피해배상은 “당시 협정과 별개의 문제로 국제법상 따로 요구할 수 있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고 서울대 백중원 교

수(국제법)는 분석한다. 운정옥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은 “최근 서울·부산·인천·삼천포 등지에서 정신대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육지 필대일기> 발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스일본 국내의에 있는 정신대 관련자료를 살살이 찾아 부 특별 정신대 인원수와 명단을 발표하고 스이에 따라 배상을 논의할 것임을 실무진 구성방안 등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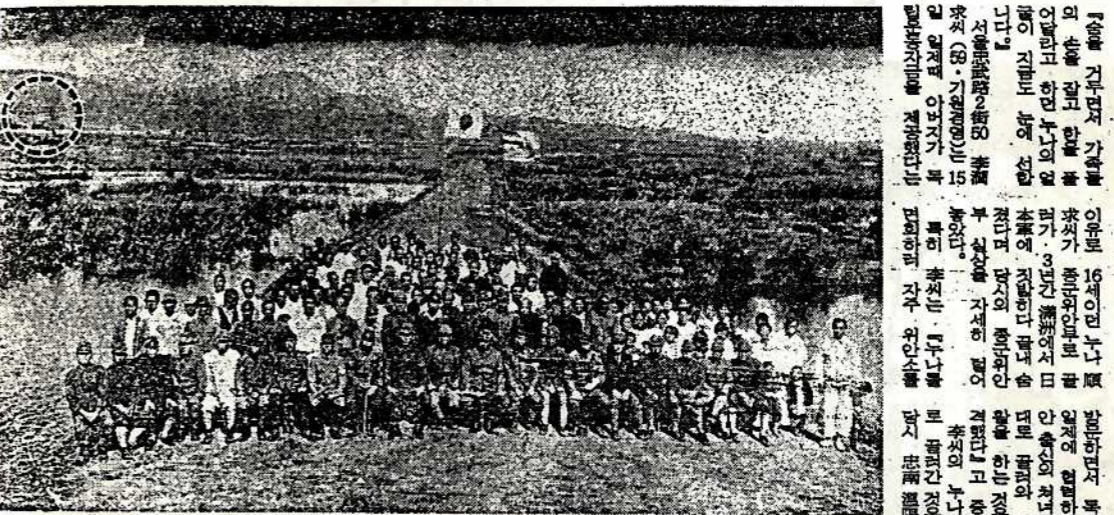
이들은 또 “정신대 문제는 나라의 유대인 화살보다도 더 잔인한 만행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야자와 수상의 한 국방문기간 중 정신대 피해배상을 공식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숙 기자>

비밀수사 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생체실험'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지법 1부 재판장인 김기현(58)을 기소했다. 김 재판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생체실험'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지법 1부 재판장인 김기현(58)을 기소했다.

말 안들으면 "生體실험" 위협 3년간 만신창이... 구불 열달만에 숨겨



서울지법 1부 재판장인 김기현(58)을 기소했다. 김 재판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생체실험'을 주도한 혐의로 서울지법 1부 재판장인 김기현(58)을 기소했다.



挺身隊누나 면회다닌 동생의恨맺힌 증언

시문의 삶이 아니었소

16세 때 끌려가...房마다 들선軍人들

200
9
1.15

敗戰하자 참호몰아넣고 爆死

징발...만행...비참한 최후 증언

동아 92.1.16



모든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모두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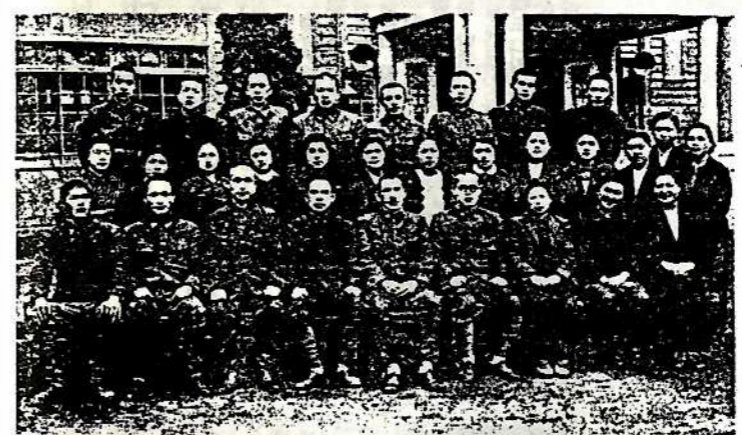
일본군에 징발된 여학생들은 대부분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지고,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모두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일본군에 징발된 여학생들은 대부분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지고,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모두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국교생挺身隊 日교사 점조직 극비징발

당시 芳山國校 韓人 夫婦교사 폭로

동아 92.1.16



여학교교생들에게 대한 정신대징발이 시작된 44년 당시 서울방산국립의 교직원 기립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지닌의 국민학생 정신대징발을 처음 발표 한 일본인 교사이케다씨, 중앙 쪽수염을 기른 이가 일본인 교장. 당시 한복인인 으로 표시되었던 洪孝眞(現명인홍부인씨), 상측구(현명인홍부인씨), 하측구(현명인홍부인씨) 등 10여명 교직원들이 보인다.

56학번 남학생징발이 양산군
전북 평민기예회이다. 7월14가

일본군에 징발된 여학생들은 대부분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지고,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모두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일본군에 징발된 여학생들은 대부분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지고,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모두가 일본군에 의해 징발된 여학생들이 모인 모습이다.

정신대 대책협 본주한 나날

회생자 있던 증언접수...소송 도와 일본 수상 방한규탄 시위 등 준비

정신대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유일한 민간단체인 서울 총로구 총로2가 미려빌딩 507호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 3인)는 최근 잇따른 정신대 회생자들의 고발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의 방한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조혜란(32·여) 간사와 자원봉사자인 채일동포 야마시타 영에(32·여)씨는 16일에는 물론 일본 수상 방문 때 접대 시위준비를 점심조차 먹지 못했다.

정신대 회생자를 증언접수...소송 도와 일본 수상 방한규탄 시위 등 준비

정신대 회생자 92.1.17 공개 항의시위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만주에서 3개월 동안 중근위안부로 생활했던 김학순(67·서울 총로구 충신동)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을 적극 돕는 등 피해 배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다소 거창한 명칭과 대는 달리 책상 하나와 전화 1대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을 알릴 협의 재상의 전무다.

책상을 놓을 지라가 그나마 마련된 것도 협의회 회원인 김

일제의 국교생 근로정신대 징발을 입증하는 학적부가 공개된 14일 이후, 노정자(72·충남 대천시 대천동)씨가 사무실에서 직접 증언한 것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생자가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 협의회는 지난 90년 11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단체로 결성된 뒤 전국을 돌며 피해자를 찾는 한편, 일본의 오키나와·미얀마 등 정신대의 한 이서린 현지를 답사해 그 실상을 공개했다.

또 여러 차례 정신대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본 수상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유지군 참여문제에 대해선 "평화유지대 참가를 포함해 대한중의 인력 협력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내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 그대로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대통령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의 민간인 무역협조 시장·기술협력·정신대문제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마치고 일본의 미온적 태도 또한 의견을 표지 못했다.

〈관련기사 2·3면〉

노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무역협조 협조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이를 한 일무대·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등을 통해 집중 협의하는 6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 각각 내각에 지시하는 수평의 합의에 그쳤다.

또 관세인하와 통상장관회담 관련 문제는 추후 양국간도 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에 영장수입 참여문제도 두 나라 정부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합의내용은 어느 정도나 무역협조 시장을 위해 일본에 제시했던 △과학기술협력·제단 설치 △의류·신발 등 16개 국산품을 수출할 때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과다 등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업체와 일본 공장의 협시장 확보 △환경기술협력 △국제어업관리센터 설치 등 5개 항목의 요구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 수교의 부활은 시장과 기술이전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가 아닌 만큼, 일본정부가 원죄적인 양측보다 구제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위해 앞장서고 강화를 추구한다.

미온적 태도 수상은 이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신대 문제 등 두 나라 수교의 복귀시에 대해 "일본정부가 해당 국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대통령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의 민간인 무역협조 시장·기술협력·정신대문제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마치고 일본의 미온적 태도 또한 의견을 표지 못했다.

〈관련기사 2·3면〉

노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무역협조 협조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이를 한 일무대·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등을 통해 집중 협의하는 6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 각각 내각에 지시하는 수평의 합의에 그쳤다.

또 관세인하와 통상장관회담 관련 문제는 추후 양국간도 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에 영장수입 참여문제도 두 나라 정부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합의내용은 어느 정도나 무역협조 시장을 위해 일본에 제시했던 △과학기술협력·제단 설치 △의류·신발 등 16개 국산품을 수출할 때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과다 등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업체와 일본 공장의 협시장 확보 △환경기술협력 △국제어업관리센터 설치 등 5개 항목의 요구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 수교의 부활은 시장과 기술이전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가 아닌 만큼, 일본정부가 원죄적인 양측보다 구제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위해 앞장서고 강화를 추구한다.

미온적 태도 수상은 이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신대 문제 등 두 나라 수교의 복귀시에 대해 "일본정부가 해당 국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없이 끝나 9.1/18 무역장벽 완화등 합의 못해

역조개선·기술이전 6월까지 실천계획 마련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대통령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의 민간인 무역협조 시장·기술협력·정신대문제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마치고 일본의 미온적 태도 또한 의견을 표지 못했다.

〈관련기사 2·3면〉

노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무역협조 협조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이를 한 일무대·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등을 통해 집중 협의하는 6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 각각 내각에 지시하는 수평의 합의에 그쳤다.

또 관세인하와 통상장관회담 관련 문제는 추후 양국간도 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에 영장수입 참여문제도 두 나라 정부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합의내용은 어느 정도나 무역협조 시장을 위해 일본에 제시했던 △과학기술협력·제단 설치 △의류·신발 등 16개 국산품을 수출할 때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과다 등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업체와 일본 공장의 협시장 확보 △환경기술협력 △국제어업관리센터 설치 등 5개 항목의 요구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 수교의 부활은 시장과 기술이전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가 아닌 만큼, 일본정부가 원죄적인 양측보다 구제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위해 앞장서고 강화를 추구한다.

미온적 태도 수상은 이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신대 문제 등 두 나라 수교의 복귀시에 대해 "일본정부가 해당 국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대통령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의 민간인 무역협조 시장·기술협력·정신대문제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마치고 일본의 미온적 태도 또한 의견을 표지 못했다.

〈관련기사 2·3면〉

노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무역협조 협조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이를 한 일무대·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등을 통해 집중 협의하는 6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작성해 보고토록 각각 내각에 지시하는 수평의 합의에 그쳤다.

또 관세인하와 통상장관회담 관련 문제는 추후 양국간도 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에 영장수입 참여문제도 두 나라 정부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합의내용은 어느 정도나 무역협조 시장을 위해 일본에 제시했던 △과학기술협력·제단 설치 △의류·신발 등 16개 국산품을 수출할 때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과다 등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업체와 일본 공장의 협시장 확보 △환경기술협력 △국제어업관리센터 설치 등 5개 항목의 요구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 수교의 부활은 시장과 기술이전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가 아닌 만큼, 일본정부가 원죄적인 양측보다 구제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위해 앞장서고 강화를 추구한다.

미온적 태도 수상은 이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신대 문제 등 두 나라 수교의 복귀시에 대해 "일본정부가 해당 국가적으로



일본수상 연설중 국회의사당앞 시위
17일 오후 미야자와 일본 수상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동안 한 국회의사당 앞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사죄' 등을 요구하며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이정우 기자〉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유지군 참여문제에 대해선 "평화유지대 참가를 포함해 대한중의 인력 협력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내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 그대로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정신대문제 대책강구
노태우 대통령에게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원의 국무총리로부터 올 들어 첫 국정보고를 받고 "관계부처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있었던 미야자와 일본 수상과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정 총리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학생까지 강제동원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국민들의 대일감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나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日,挺身隊관련자료 소각

“敗戰 직후 정부서 명령”

天津현영대근부 旧日軍 용인

【東京=共同통신사】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군 용인(舊日軍)은 1945년 8월 15일 패배 후, 정부에서 명령을 받고, 대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1945년 8월 15일 패배 후, 정부에서 명령을 받고, 대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1945년 8월 15일 패배 후, 정부에서 명령을 받고, 대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大邱에 「從軍위안소」 있었다

“17~20세 처녀 20여명 수용”

【大邱=共同통신사】대邱(대구)에 1945년 8월 15일 패배 후, 정부에서 명령을 받고, 대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1945년 8월 15일 패배 후, 정부에서 명령을 받고, 대량으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挺身隊만행 세계에 알린다

정신대 향후대책에 대한
기자회견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일시: 1992. 1. 22(수)
장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日법원에 제소... 추모비 건립 추진

「對策協」유엔인권위에 實相상정키로
國을 방문,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신대의 실상」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정신대의 실상」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정신대의 실상」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실상조사와 신고전화접수 활동은 계속할 것이며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나이는 13~20세(현재 나이 61~73세)였다. <文教기자>

「挺身隊조사委」곧구성

정부 실태 파악 뒤 日에 배상 촉구키로

被擄者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서울=共同통신사】정부는 22일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정신대문제 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정신대문제 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정신대문제 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韓、挺身隊 보상 요구

北朝鮮挺身隊 補償金 請求 韓政府 拒絶

【北朝鮮】北朝鮮政府は、韓政府に、北朝鮮挺身隊の補償金を請求する。韓政府は、この請求を拒絶した。北朝鮮政府は、挺身隊員は、韓政府の侵略戦争のために犠牲を払ったと主張している。韓政府は、挺身隊員は、自らの自由意志で参戦したと主張している。この問題は、北朝鮮と韓国の間で、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北朝鮮は、挺身隊員に、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韓国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この問題は、北朝鮮と韓国の間で、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北朝鮮は、挺身隊員に、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韓国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日수상 議會서 挺身隊 사과 발언

日首相 議會 挺身隊 謝罪 発言

【東京】日首相は、議會で、北朝鮮挺身隊の参戦について、謝罪の言葉を述べた。首相は、挺身隊員は、自らの自由意志で参戦した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北朝鮮挺身隊 보상 요구

北朝鮮挺身隊 補償金 請求 韓政府 拒絶

【北朝鮮】北朝鮮政府は、韓政府に、北朝鮮挺身隊の補償金を請求する。韓政府は、この請求を拒絶した。北朝鮮政府は、挺身隊員は、韓政府の侵略戦争のために犠牲を払ったと主張している。韓政府は、挺身隊員は、自らの自由意志で参戦したと主張している。この問題は、北朝鮮と韓国の間で、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北朝鮮は、挺身隊員に、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韓国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この問題は、北朝鮮と韓国の間で、長らく議論されてきた。北朝鮮は、挺身隊員に、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韓国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日수상 議會서 挺身隊 사과 발언

日首相 議會 挺身隊 謝罪 発言

【東京】日首相は、議會で、北朝鮮挺身隊の参戦について、謝罪の言葉を述べた。首相は、挺身隊員は、自らの自由意志で参戦した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首相は、挺身隊員は、戦後の生活費や医療費を支払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

美인본 挺身隊 민행 맹공격

있을수 없는 人權유린

日정부 책임회피 비난

【東京】美人本(美人本)은 北朝鮮挺身隊의 민행에 대해 맹공격을 가했다. 미인본은,挺身隊員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日本政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인본은,挺身隊員은,自らの 자유意志로参戦했지만,日本政府는,挺身隊員을 人權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인본은,日本政府는,挺身隊員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인본은,日本政府는,挺身隊員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인본은,日本政府는,挺身隊員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인본은,日本政府는,挺身隊員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東京】挺身隊원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東京】挺身隊원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挺身隊원 위문회 "혼신의 힘"

【東京】挺身隊원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문회는,挺身隊원들에게, "혼신의 힘"으로 참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0년 10월 18일

여성계 「정신대」 규명 적극 활동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정선영, (오른쪽) 정선영, (왼쪽) 정선영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정선영, (오른쪽) 정선영, (왼쪽) 정선영

정신대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활발

정신대 "적극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정선영, (오른쪽) 정선영, (왼쪽) 정선영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정선영, (오른쪽) 정선영, (왼쪽) 정선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5명이 17일 하오 3시 일본대사관을 방문.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과발언을 촉구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시이하시 외무성전문조사실에게 전했다. (李惠蘭기자)

정신대- '무관심' 서 끌어내기

민간차원 진상조사 못한다, 일본의회답변 파문 국내 여성계, '사실인정·유족보상·사실규명' 등 요구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한국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신대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일본의회에서 있었음이 밝혀져 국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원은 지난 6월6일 일본의회 참의원예선위원회에서 사 회담의원 모토오카 소지(本岡大次郎)가 「정신대에 중군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라」고 질의한데 대해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清水博雄)가 「정신대사업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업무이며 법률상 각호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중군위안부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밝힌 것 ▲정신대의 전모를 밝힌 것 ▲정신대 희생자를 위해 위령비를 세울 것 ▲생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할 것 ▲역사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푸레방, 대한YWCA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아시아여성신학 교육원, 이화여자대학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가 17일 하오 3시 일본대사관을 방문.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과발언을 촉구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시이하시 외무성전문조사실에게 전했다. (李惠蘭기자)

정신대 규명 활동에 힘쓰는 여성계 인사들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 정선영, (오른쪽) 정선영, (왼쪽) 정선영

한겨레 '91.7.9(수)

[1998.6.18 제3종우원클(가)급인가] 제820호



여성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회원 50여명이 가이후 일본 수상의 방한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신대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임원호 기자>

정신대 배상·공식사과 요구

8개 여성단체 일본수상 방한반대 거리행진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회장 윤정옥·65)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정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의실에서 가이후 일본 수상의 방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대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 수상이 방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 강제로 끌어들여 강간·학대·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삼아왔다"고 지적하며, "정신대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을 할 것 등 6개항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 회원 5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오께 종로구 종로2가 파고다공원에서 가이후

일본 수상의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종로1가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회장 김재홍)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스이봉창 의사 참살에 대한 사과와 묘역 참배 △제일동포 지문날인제 철거와 법적지위문제의 즉각 해

결 등을 요구했다.

4.21 한겨레

정신대 사죄에 노수복에게서 귀국

18일대 일제에 끌려 동남아전선 전진 광복뒤 타이정착...7년만에 다시 찾아

1980년대 말 일제 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가 온갖 시련을 겪어온 노수복(70·타이 찾아와 시)씨가 20일 고향을 맞아 타이 주재 한국대사관과 교민들의 주선으로 7년 만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았다.

자신의 한평생 삶이 알려지던 84년 광복회 초청으로 광복 뒤 처음 고향을 찾았던 노씨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마중 나온 노수현(66·경북 예천군 호명면)씨 등 친지들을 만나고 이국땅에서 한평생 삶을 살아온 설움에 복받친 듯 "고국의 하늘과 친지들을 다시 보니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노씨는 지금까지 일본이 공식 사과나 배상의 뜻조차 보이지 않는 데 대해 "50년 남짓 일본이 내게 안겨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과거의 고통에 지눌려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꽃다운 나이인 18살 때 갑자기 일제에 의해 동남아 전선에 끌려가...일본군에 '몸을 바쳐야



고향을 맞아 7년 만에 다시 고향땅을 밟은 노수복(가운데)씨가 20일 김포공항에서 동생 노수현(오른쪽)씨와 사촌언니 권수남씨를 만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정우 기자>

日,挺身隊 공식조사 발표

日군이 정신대 동원 칙령

法令
발견

【서울=뉴시스】 日軍정신대(挺身隊)의 발원(發源)은 1937년 11월 26일 日軍정신대령(挺身隊令) 제1호(第一號)로 공포(公布)된 칙령(勅令)이다. 이 칙령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구성(構成)과 임무(任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칙령(勅令)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구성(構成)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임무(任務)는 日軍정신대(挺身隊)의 임무(任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日軍정신대(挺身隊)의 구성(構成)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임무(任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칙령(勅令)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구성(構成)은 日軍정신대(挺身隊)의 임무(任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日軍정신대(挺身隊)의 발원(發源)을 규명(闡明)한 日軍정신대(挺身隊)의 임무(任務)를 규정(規定)한 칙령(勅令)의 표지(表紙)이다.

— 관련자료 모음 —

金一晚 「天皇의 軍隊는 朝鮮人 慰安婦」, 三一書房 1976年
 金一晚 「軍隊慰安婦」, 現代史出版會, 1982年
 千田夏光 「從軍慰安婦」(두권) 講談社, 1982年
 吉田清治 「朝鮮人 慰安婦와 日本人」, 新人物往來社, 1977年
 川田文字 「赤瓦의 家」, 筑摩書房, 1987年
 山田清吉 「武漢兵粘」, 圖書出版社 1987年
 廣田和子 「證言記錄 從軍慰安婦, 看護婦」, 新人物往來社, 1975年
 高崎隆治編, 解說 「軍醫官의 戰場報告意見集」, 不二出版, 1990年
 長澤健一 「漢口慰安所」, 圖書出版社 1983年
 백우암 「여자정신대 1, 2」(두권), 清談文學社, 1989年
 허문순 「분노의 벽」(세권), 自由時代社, 1989年
 정현용 「잃어버린 강」(세권), 행림출판 1989年
 임종국편저 「정신대실록」, 일월서각 1981년
 김문숙 「말살된 墓碑」, 地平 1990年
 윤정모 「내 예미는 조센씨였다」
 「여성과 관광문화」, 정신대답사 보고서, 윤정옥 강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8년
 요시다 세이지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 청계연구소(역),
 청계연구소, 1990년
 샌다가꼬오 [중군위안부], 이송희(역), 백서방, 1991년.

-시청각자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소장:738-5340)-
 슬라이드 「바다의 기억」, 도미야마 다에코 작
 비디오 태평양의 원혼들, 정신대편 (KBS)

광고 합니다

순수 민간 여성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관심있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대가 급부상한 최근 일손과 자금이 극히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신대 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판권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구좌 —

국 민 : 813-01-0182-492—정신대
농 협 : 053-01-176711—정신대
상 업 : 109-05-153750—정신대
조 흥 : 304-01-120125—정신대

판 권

정신대문제 자료집 (수정증보)

발 행 인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1 판 발 행 일 : 1991년 5월 28일

수정증보판발행일 : 1992년 2월 1일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17-3호
(영나빌딩 102호)

TEL. 365-4409 FAX. 365-4409